

정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TF’ 첫 회의도 못 열었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서 “광주 군공항 이전 직접 주관” 밝힌 지 82일 무안군, 7월 ‘공모 전환’ 입장 번복했다가 9월 ‘3대 요구 조건’ 제시 광주시, “정부 주도 원칙… TF 즉시 가동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직접 주관하겠다고 밝힌 지 82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실 6차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무안군이 지난 7월 그동안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전부지 공개 공모’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으나, 9월 들어 새롭게 ‘3대 요구 조건’을 대통령실에 제시하면서 협상태이블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간공항 선(先)이전, 재원 지원약속 구체화, 파격적인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에 따르면 TF는 최근까지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다만, 부단체장급 실무회의만 두 차례에 열렸다.

실무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관별 의견 차이가 있어 대통령실이 요구사항을 취합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타운홀미팅에서 이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주관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기재부가 참여하는 6차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7월 7일 대통령실 우상호 정부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정과제로 사실상 확정했다.

그럼에도 “물밑 실무 협의만 간헐적으로 진행했고, 최근에는 자료 제출만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증언처럼 공식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TF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무안군의 애초 입장변복이 자리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지를 무안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 대규·경복 통합신공항처럼 공개 모집과 숙의를 거치는 공모 방식을 검토하자”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홀미팅 당시의 협조 기류와 결이 달라 ‘원점 재검토’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6차 TF 역주행’ 우려를 낳았다.

이후 무안군은 다시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 협상태이블의 여지를 만들었다.

8월 말 실무 접촉 과정에서 무안군이 전달한 ‘3대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이전 이행’, ‘광주시가 밝힌 1조원 지원 약속의 이행 로드맵 제시’, ‘중앙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시 약속만으로는 주민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과 일정을 명시한 이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경제가 체감할 인센티브 패키지를 서면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안군의 전언이다.

일단 광주시는 정부가 군공항 이전을 주관하되,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유지하며 민·군 ‘동시 이전’을 고수한다는 기본 노선을 재확인했다. 다만 무안군이 제시한 조건 가운데 무안 지역경제 발전 혜택의 구체적 내용만 확인된다면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가장 까다로운 쟁점은 이전의 ‘순서’와 ‘내용’이다. 공모 전환 요구를 정부 주관 틀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무안 지역경제 보장 패키지를 산업·물류·관광, 기반시설 확충, 재정 투입 구조까지 계량해 어떻게 제시할지, 그리고 민항과 군항의 이전 수순을 어떤 로드맵으로 합의할지가 핵심이다.

민간공항 선 이전 문제에 대해 무안군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 시그널도 있지만, 광주시는 무안군의 조건 확정과 정부 TF의 대안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협상과 추진을 진행해 달라는 ‘조속 처리’ 요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실적 제약도 있다. 광주 민간공항의 선 이전이 합의되더라도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재개장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안공항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광주시는 더 늦기 전에 ‘타임 테이블’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TF 첫 회의 일정을 못 박고, 무안군이 정부에 요구하는 경제 발전 패키지를 수차례 기한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숫자와 같은 일정표를 공유할 때 비로소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기본 방침은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유지하고, 지역민 반발과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7월 초 광주군공항 이전 총사업비 재산출에 착수했으며 현재 추계는 5조 74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이전지 지원·금융 비용 등이 포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재단〉

“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처벌 중심 규제 바뀌야”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

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정부, 산재 사망사고 빈발 건설사 영업 중단시킨다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에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관련기사 9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주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장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에 전제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